

[별지 제4호 서식] 평가결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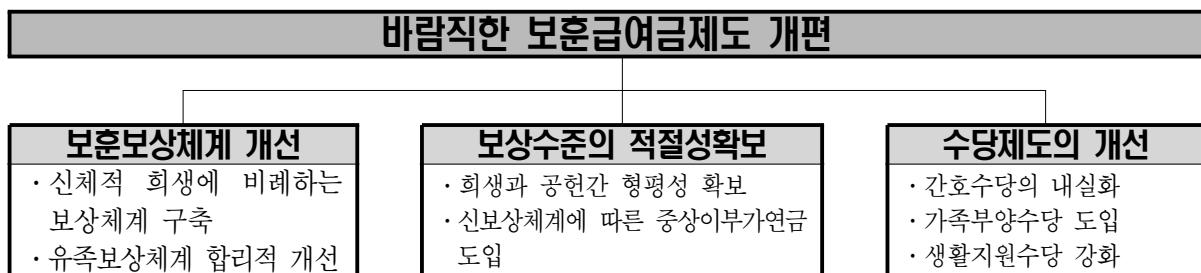
정책연구과제명	보훈급여금제도의 개편방안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봉
부서/과제담당관	보상정책과/과장 오진영	담당공무원	사무관 이제복
연구방식	1. 위탁형 용역(○) 2. 공동연구형 용역() 3. 자문형 용역()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2. 수의계약(○)		
연구기간	2008. 07. 10. ~ 2008. 12. 5. (약 5 개월)		
연구결과	<p>이 연구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행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일시금 제도 도입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훈급여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목적이 있음.</p> <p>이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희생정도에 상응한 보상체계 설계, 각종 수당제도의 개편, 일시금 제도 도입 및 의료, 직업재활 등 체계적인 재활프로그램 방안을 마련하였음.</p> <p>즉,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훈제도 발전을 위한 유용한 방향성을 도출함.<별지 1참조></p>		
평가결과	<p><별지 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희생도에 비례한 보상체계구축을 통해 보훈급여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게 연구가 수행됨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및 담당자 면담, 세미나 등 연구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방법을 사용함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연구의 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음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훈급여금제도 개편방안은 보훈제도 발전을 위한 유용한 제안으로 용역결과를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직한 개편방안 및 향후 소요재정 추이 분석 등 연구 과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어 향후 정책에 참고할 시사점을 다수 제시하고 있음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이정우	보상정책과장 오진영

연구 결과

1. 보훈급여금제도의 합리적 개편

가. 개편의 기본방향

- 신체적 희생에 비례하는 보상체계의 구축
 - 보상금 준거기준의 재정립 및 취업활동이 곤란한 중상이자에 대한 중상이 부가연금 도입
 - 일정 장애율(현 상이7급 수준) 미만자에 대한 일시금 제도 도입
- 간호수당의 내실화, 부양가족수당의 도입 등 각종 수당제도의 개선
- 유족보상체계의 합리적 개선



나. 세부과제별 개편방안

□ 보상의 준거기준 및 등급별 지급방안

- 보상 기준선으로 전국가구 가계지출액 중 1인 가구 소득을 최선안으로, 비교적 합의 도출이 쉬운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차선책으로 고려
 - ※ 전국가구 가계지출액 중 1인 가구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0% 장애자의 보상금은 약 130만원,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68만원 수준임
- 100%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을 위의 준거기준에 맞춘 후 그 이하 등급은 장애율에 비례하도록 차등 지급
 - ※ 50% 상이자의 기본보상금은 100% 상이자 보상금의 1/2수준

□ 중상이부가금 제도 도입

- 취업활동이 곤란한 고도의 상이자에게 기본 보상금 외에 중상이 부가연금을 추가 지급
- 지급액은 현 간호수당의 일부를 중상이 부가연금으로 전환

□ 일시금 제도의 도입

- 경제활동이 가능한 상이 정도가 경미한 일정 장애율 미만자(현 상이7급 수준)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지급
 - 상이시점부터 사회보장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60세)까지를 노동가능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상받게 될 보상금액을 지급
- 지급액은 현행 연령에 구분없이 일정 장애율 미만자가 수급하는 보상금액의 5년분을 지급

□ 각종 수당제도의 개편

- 간호수당제도의 개선
 - 현행 상이 2급 이상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실질적인 개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고 지급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상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준용하여 책정

<참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097,000원	897,000원	760,000원

- 가족부양수당의 도입
 - 생계보조성격의 현행 수당제도를 가족부양성격의 수당과 생활지원을 위한 수당으로 양분
 - 가족부양수당은 보훈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며,
 - 생활지원수당은 모든 보훈대상자들이 가칭 국가보훈선 이상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조사를 통하여 지급

※ 가구원수를 고려한 최저생계비의 130~150%이내에서 국가보훈선 설정

-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경우 일정비율만큼 조정지원하여 점진적으로 보훈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

□ 유족보상제도의 개편

○ 대상자 본인 사망당시 수급받던 보상금의 일정비율을 적용

- 구체적으로 유족보상금은 대상자 본인이 받던 보상금의 60%수준으로 책정

※ 군인연금의 55~70%, 국민연금이 기본연금의 40~60% 수준임

○ 유족일시금제도 도입

- 유족(배우자, 자녀 등)에 대해 상이자 본인이 받던 보상금 중 약 2~3년분의 보상금 총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방안 검토

2. 재활서비스 강화

○ 의료서비스 강화

- 의료재활서비스의 경우 위탁병원 지정확대, 이용 활성화 등 의료시설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 필요

○ 체계적인 재활, 직업교육 등의 확대실시

- 생애주기적(Life-cycle) 측면에서 보훈대상자를 위한 직업교육, 노후재무설계 교육 등을 지속적, 주기적으로 강화
- 경제활동능력이 있는 보훈대상자의 재활을 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 및 취업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자활할 수 있는 토양 마련

평 가 결 과

1. 정책연구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하후상박형 현행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경상이자에 대한 일시금 제도 도입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훈급여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연구는 신체희생도에 비례한 보상체계의 구축 및 상이자를 위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마련 등 향후 보훈제도의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용역 발주 당초의 목적에 부합

2.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내외 유사 관련제도를 심도 깊게 분석하였고, 전문가 자문 및 담당자 면담, 2차에 걸친 세미나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였음
- 이를 통해 연구를 위한 각종 기초 자료를 적절하게 수집하고 연구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희생정도에 상응한 보상체계 설계, 수당제도의 개편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일시금 제도 도입 범위 및 구체적인 지급액 제시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으며

- 또한, 의료서비스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할, 직업교육 확대실시의 필요성 등 맞춤형 종합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즉, 본 연구는 과업지시서의 계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고 평가됨

4.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본 연구는 보훈급여금 제도에 관한 세부과제별 심도 있는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 본 연구 결과물은 보훈보상체계 개편을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또한, 실제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보훈급여금 체계 개편방향 및 향후 소요재정 추이분석 등 연구 과제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시사점을 다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전문위원의 연구 내용 평가

1. 장해율에 비례하는 보상체계의 구축

○ 제안의 배경: 현행의 보훈보상과 관련된 장해등급 판정체계는 육체적 기능의 손상에만 국한하고 있으며, 소득획득능력의 손상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반영이 미흡함. 뿐만 아니라 장해등급간 보상수준의 편차(특히 장해7급)가 부적절하게 책정되어 제도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평가: 보훈대상자의 신체적 장해상태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활용가치를 동시에 감안하여 책정하게 되는 장해율은 분명 선진적 제도로써 상당수의 복지선진국들에서도 실제로 적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보훈제도에서 이러한 장해율의 도입방안은 상당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현행의 산재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공무원연금제도 등에서도 주로 의학적 관점에서 신체적 손상을 중심으로 장해등급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훈제도에서 선도적으로 장해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됨. 따라서 동 방안은 타 사회보험제도들의 제도적 개선추이 그리고 제도적 · 행정적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2. 생활조정수당을 생활지원수당으로 전환

- o 제안의 배경: 각종 소득보충적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제도간 기능적 중복을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보장
- o 평가: 생활지원수당의 도입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을 함. 하지만 현행 국가보훈처의 행정적 인프라를 감안해 볼 때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조사와 자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나 행정능력을 갖추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됨. 따라서 행정적 관리의 간편성과 수월성을 도모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일례로 가족수당제도의 도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일시금제도의 도입

- o 제안의 배경: 경상이등급인 상이7급에 대하여 연금 대신 일시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함.
- o 평가: 동 제안의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함. 하지만 현재의 경우 상이7급에 대해서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이 되며, 이 경우 별도의 제반 부가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상이7급에 대해 연금 또는 일시금의 선택권을 부여하게 될 경우 대다수는 연금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시금을 직권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동시에 대상자의 반발에 대비하여 별도의 보완적 조치(일례로 동일 부상에 대한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외조항의 적용, 각종 재활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의 포괄적 보장 등)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유족일시금제도의 도입

- o 제안의 배경: 2 - 3년분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 유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
- o 평가: 일반적으로 유족연금은 사망한 부양자가 법적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망 이후에도 생존한 배우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중단은 당연한 제도적 조치이므로 유족일시금의 지급 또한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할 수 없을 것임. 하지만 18세 이상 자녀의 생계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보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일례로 대상자가 학업(일례로 대학재학)이나 군복무 등으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 유족연금의 지급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